

정진욱·안도걸 “광주에 정부 AI 사업 집중돼야”

국가NPU컴퓨팅센터·AI연구소 설립 제안
인프라·생태계 탄탄 ‘AI 신도시’ 최적지
김민석 “광주, AI핵심도시 발전케 할 것”



정진욱



안도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광주에 정부의 AI 관련 사업이 집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7일 열린 예결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AI 대전환에 발맞춰 세계 AI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시티 조성’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시티’ 사업은 한 도시가 완전히 AI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AI인프라와 생태계가 탄탄하고 현재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4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
특히 ‘AI시티’ 사업 중 핵심 사업인 ‘광주AI모빌리티 국가신도시 조성사업’(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20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 추진 기본 동력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광주AI모빌리티 국가신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차량 실증과 운행을 위한 교통 체계와 AI 기반 도시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의 첨단인프라가 구축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AI 모빌리티 규제프리존

을 형성하고 이와 연계한 미래차 첨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후보지로 ‘전남’을 최종 선택한 민간 컨소시엄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김 총리에게 묻자 김 총리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금 광주시민들은 상실감 속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부가 광주를 위한 후속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산 NPU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총사업비 1조원)와 ‘국가 AI연구소’(총사업비 6천억원)를 광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총리가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도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광주가 AI 컴퓨팅자원과 연구기능, 인력양성 기능이 하나로 집적된 ‘국가 AI시범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광주는 2020년부터 추진된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가 AI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AI 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춘 중심”이라며 “AI 생태계 핵심 거점이 완성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광주는 AICA(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를 중심으로 16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전남대·조선대·GIST 등 교육·연구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전력,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완비돼 있다”며 “AI산업 전주기를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이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국가 AI 시범도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인 광주 AX실증밸리 계획과 연계해 AI추론 단계 실증을 위한 전용 컴퓨팅 자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며 “외산 GPU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NPU를 실증하기 위해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AI시대에는 인프라와 산업이 융합된 광주에 R&D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완전한 AI 중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광주에 ‘국가 AI연구소’를 설립해 5급 3특 중 하나인 호남권 메가시티 거점 도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주의 인프라, 기술력, 인재풀을 바탕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에 버금가는 실질적 AI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광주가 AI 핵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직기소대응특위 이견태 의원과 이주희 의원(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옥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공개하며 검찰의 조직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형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외압은 근거없는 선동” vs 野 “윗선 개입 여부 밝혀야”

검찰 ‘대장동 비리’ 형소 포기

민주 “李대통령 겨냥 정치개입 주장 억지”
국힘 “정권 차원 사법개입이자 정의 후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형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에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며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작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보다 뻔뻔한 이중잣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형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

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형소 ‘포기’가 아닌 형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형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

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형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임산부·영유아가정 교통비 상이”
정당은 시의원 “차치구별 통합 시금”

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당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는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비전으로 5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서·북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동구 맘택시’에 5천500만원, 서구는 둘째 이상 가정 대상 ‘아이맘행복택시’에 5천만원, 북구는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아이맘교통비’에 1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광산구·남구는 관련 제도와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출산·양육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 향후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고,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